같은 교통약자인데…광주 노인보호구역 '안전 장비' 태부족

10월 기준 5개 자치구 통틀어 61곳 과속·불법 주정차 단속 각각 2대·5대 어린이보호구역 292대·228대 '차이' 장비당 적발건 실버존이 5배 이상 多

광주 지역 노인보호구역 곳곳의 교통 안전이 불법 주정차 등에 위협받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장비의 설치율은 같은 교통약자 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17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 0월 기준 광주 지역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은 동 구 8곳, 서구 14곳, 남구 9곳, 북구 13곳, 광산구 17 곳등총61곳이다.

노인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버존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방자치단 체장이 지정하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마 찬가지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스쿨존처럼 일반 도로에서 위반 때보다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작 이를 적발할 수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는 현재 광주 실버존 중 2곳(3.27%)에만 존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도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건 광산구



광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과속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의 설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남구 구동 광주공원 인근 노인보호구역으로, 언덕길 양쪽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즐비해 보행자들의 안전 위협과 차량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에 있는 목련초등학교-광산구노인복지관 1대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스쿨존과 통합 운영 중인 장

서구 양동시장역 부근에 있는 나머지 1대의 경우 올해 설치됐는데, 현재 사용 전 검사 단계 라 단속 진행은 아직이다.

반면 스쿨존의 경우 광주 지역 452개소 중 292 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 설치율은 64.6%

정도로 집계됐다.

이 같은 차이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율에서도 드러났다.

올해 10월 기준 스쿨존에 설치된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동구 20대, 서구 41대, 남구 28대, 북구 5 2대, 광산구 77대 등총 228대이나, 실버존은 남구 2대, 서구 3대에 그쳤다.

단속 장비가 있는 서·남구는 올해 1-10월 각각

같은 기간 스쿨존의 적발 현황은 서구 5천248 건, 남구 1천347건이었다.

2천83건, 553건의 불법 주정차를 적발했다.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스쿨존이 훨씬 많지 만, 장비 1대당 적발 건수를 감안하면 서구(실버 존 약 694건, 스쿨존 약 128건) 와 남구 (실버존 약 276건, 스쿨존 약 48건) 모두 실버존이 5배 이상

이를 방증하듯 이날 광주 노인보호구역 곳곳 은 불법 주정차가 난립해 있었다.

동구 서석동 서석노인당 인근 노인보호구역 은 도로 양쪽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었지만, 차가 세워진 상태였다.

도로 위에는 시속 30㎞ 제한을 알리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으나, 오가는 차량 다수는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쌩쌩' 소리가 날 정도로 달렸다.

비슷한 시각 남구 구동 광주공원 인근 노인보 호구역에서도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차량은 다수 포착됐는데, 언덕길 양쪽에 불법 주정차가 빽빽 이 들어선 탓에 이곳을 지나는 차들은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다.

인근 주민 김모(80대·여)씨는 "별도 보행로가 있긴 하나 가로수 뿌리 등에 걸리는 게 일쑤라 휠체어 이용자들은 주로 도로로 다니는데, 차가 지나갈 때마다 주정차된 차량 뒤로 몸을 피해야 한다"며 "차가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몰라 늘 불 안하다"고토로했다.

이렇듯 단속 장비의 부재로 노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광주 자치구 관계자 들은 "스쿨존과 달리 의무가 아닌 탓에 설치율 이 저조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설치 해 왔다"며 "스쿨존 설치 대비 예산도 저조해 한 계가 크다"고 밝혔다. /서형우기자

전국 돌며 마약류 유통 외국인들 무더기 검거

전남경찰, 58명 송치…49명은 구속 7명 제외 불체자…15억 상당 압수도

전국 각지를 돌며 해외에서 밀반입한 야바, 필로폰,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이 무 더기로 검거됐다.

17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 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태 국인 A (40대)씨 등 58명을 최근까지 순차적으 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49명은 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7-10월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들여온 마약류를 전국 각지에 유통한 혐 의 등을 받는다.

송치된 이들 중 24명은 마약 밀수·판매에 가 담했다. 나머지 중 24명은 단순 투약자, 10명은 마약을 소지하거나 알선한 혐의다.

이들 58명은 라오스 국적 1명을 빼곤 전부 태 국인이었던 가운데 51명은 불법체류자였다.

밀수·판매자들은 대포차를 이용해 국내를 돌

며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국정 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합동 단속을 전개

검거 과정에선 판매책들로부터 필로폰 282.7g (약 9억4천만원), 야바 1만1천782정(약 5억9천 만원), 대마 5128g(약 5천120만원) 등 15억8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해 국내에 유통되는 것 을 차단했다.

또 태국에 있는 또 다른 총책으로부터 마약을 들여온 A씨를 쫓던 과정에서 경찰은 그가 무면 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2대와 부딪치는 사 고를 낸 후 도주한 사실도 파악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마약류 공급책을 추적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고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 이라며 "외국인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 우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만큼 외국인 대포 차 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함께해 나가겠다" 고밝혔다. /안재영기자

5·18재단,스카이데일리외부필진 2명고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사과까지 했음에도 왜곡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 매체의 관계들이 수사 기관에 고발됐다.

1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와 함께 스카이데일리 외부 필진 A·B씨를 5·18민 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수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

재단은 A씨가 2024년 4-11얼 '울림' 칼럼을 통 해 총 6차례에 걸쳐 북한 특수군 개입설 등 허위 주장을 게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특정 칼럼에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의 북한 특수 군 개입 주장 연재 기사를 소개·인용하며 5·18 당시 북한군이 활동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복 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상기자

檢, '부정 대출' 前 저축은행장 '징역 4년' 구형

광주 지역 한 저축은행장으로 있을 때 각종 대출 비리에 연루된 6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 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은행장 A (60대)씨 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에는 광주 모 축협 지점장 B(50대)씨와 부지점장 C(40대)씨, 팀장 D(40대)씨 등 7명이 함 께 기소됐다.이들은 매매계약서 및 통장 위·변조 와허위감정의뢰등을통해광주모축협과모원 예농협 등에서 총 115억원을 부정 대출한 혐의 등 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업계약서' 3부를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35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해 준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에 대해 이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BM의경우피해자인금융기관과의합의를 위한 변제 기일 등을 요청해 결심이 분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피고인 8명 전원에 대 해 선고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자신이 속해 있던 은행에서 특정

업체에 70억원의 대출을 부정하게 해줬다는 혐 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안재영기자

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송강 (사법연수원 29 기)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지난 10일 검사장 18명과 함께 내부망에 '검찰

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 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 연수원 29기)도 이날 사의를 전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

는 이 글에 송 고검장은 함께하진 않았으나, 당 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제대로 된 설 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사 징 계 추진으로 촉발된 검사들의 반발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안재영기자



+